

콘텐츠 산업 성장 견인을 위한 금융시장과 조세 제도

빈기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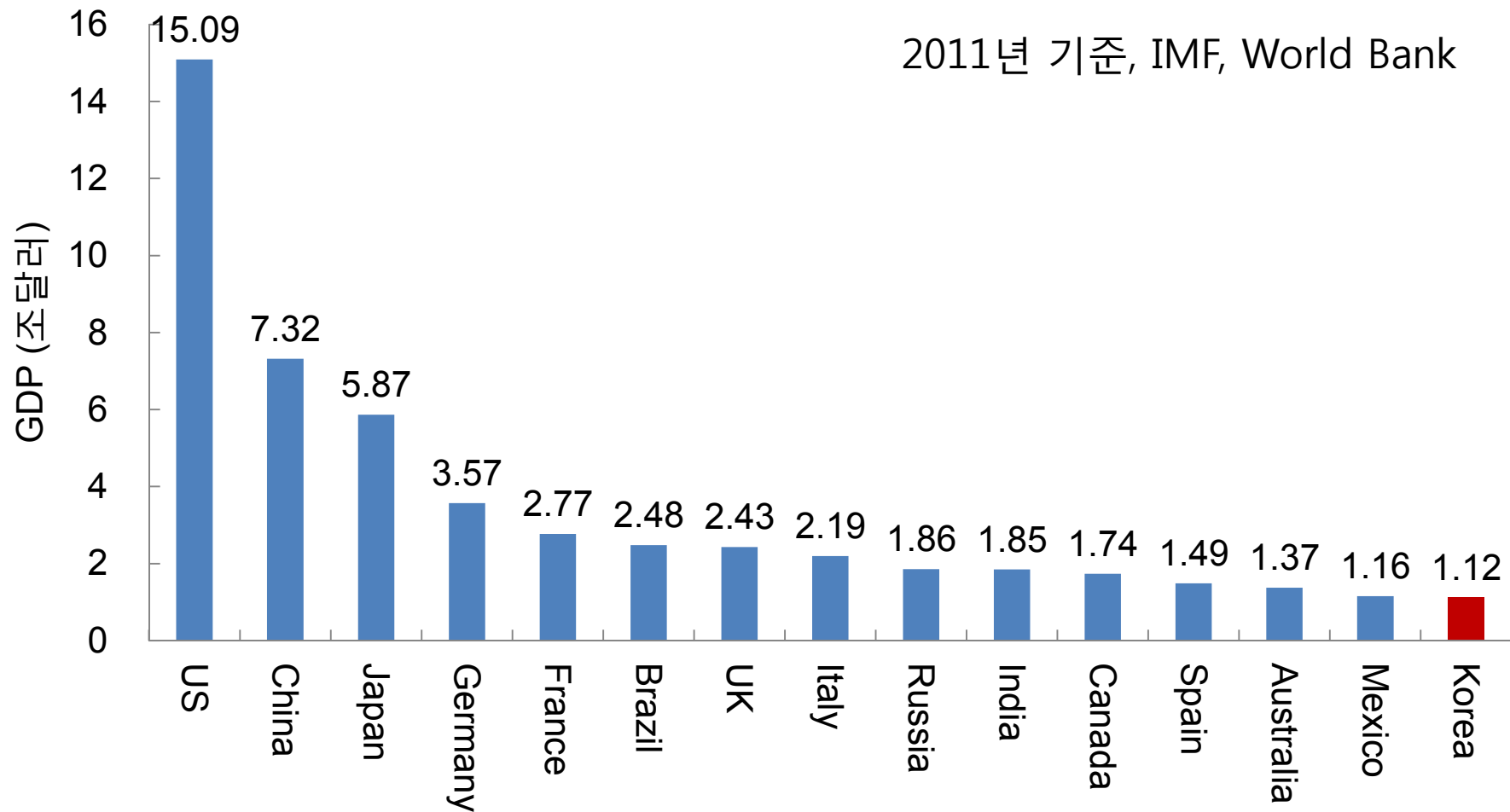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bink1@mju.ac.kr

주관/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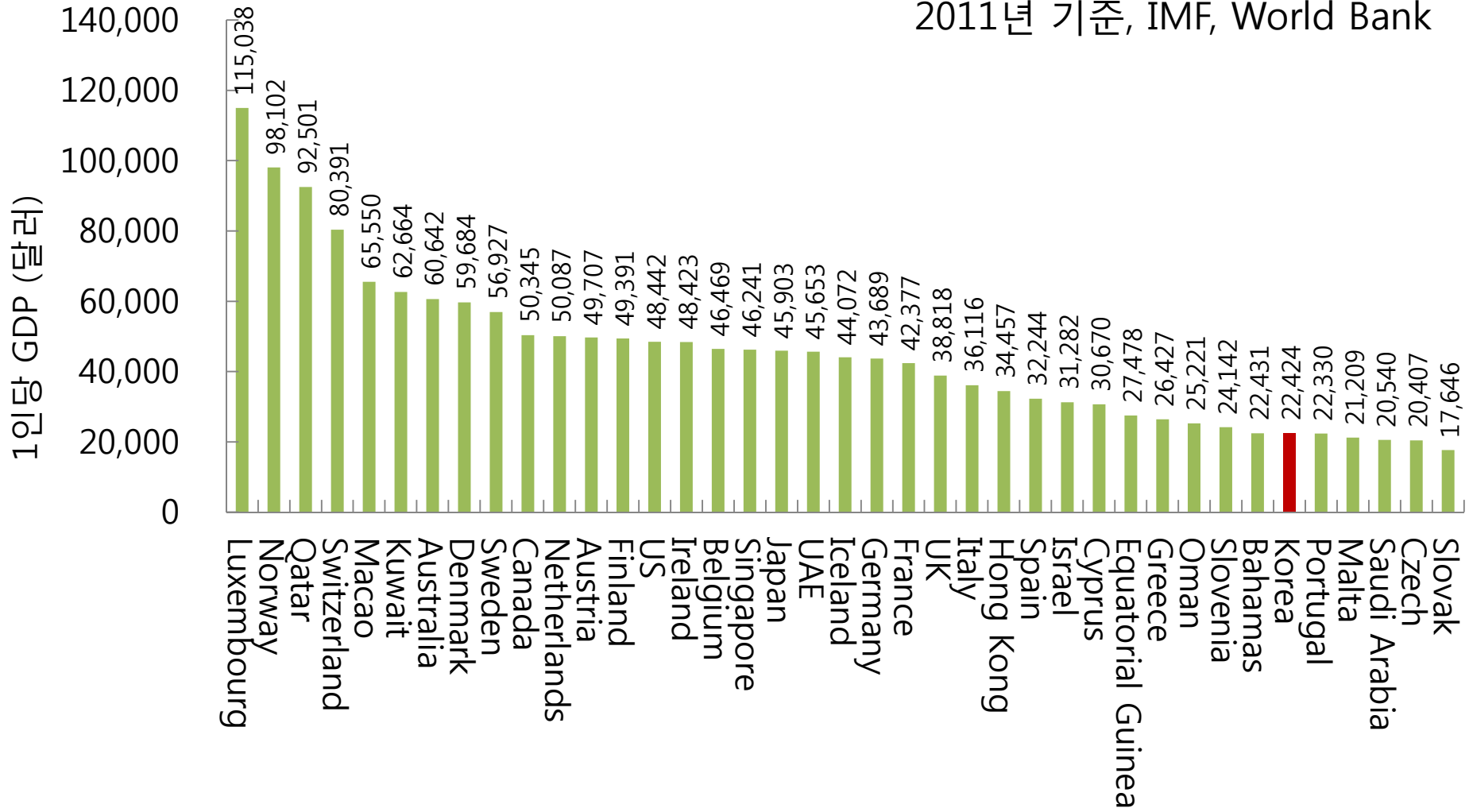
한국 경제의 성장과 위상

주요국 총 GDP 순위 (2011년 기준)



주요국 1인당 GDP 순위 (2011년 기준)

2011년 기준, IMF, World Bank



한국 경제에 대한 진단

- ❖ 대선을 앞둔 정치인과 국민들의 한 목소리
 - “경제가 성장했음에도, 국민들의 삶이 팍팍하다...”
 - 잘 사는 국가라는 착각...
- ❖ 삶이 팍팍한 이유는?? → 간단, 1인당 GDP가 낮다!!
 - 아직 풍족한 경제적 번영을 누리기 어려운 수준의 경제 성장
 - Ex. 중국: GDP에서는 2위의 경제 대국, 1인당 GDP에서는 5,400달러 정도로 세계 84위 (2011년 기준)
 - 한국의 1인당 GDP는 약 22,000 달러, 미국은 48,000달러
 - 한국인이 주 5일 일하고 2일 쉬지만, 미국인은 약 2.5일만 일하고 4.5일 놀아도 평균 1인당 동일한 소득 발생
- ❖ “얼마나 부가가치가 높은 생산물을 생산하느냐?”

경제 성장의 요소

❖ 대표적인 생산 요소

- “자본(capital)” & “노동(labor)”
- 토지(land), 원자재(natural resources), 기술(technology)

❖ 한국 경제의 현재 실정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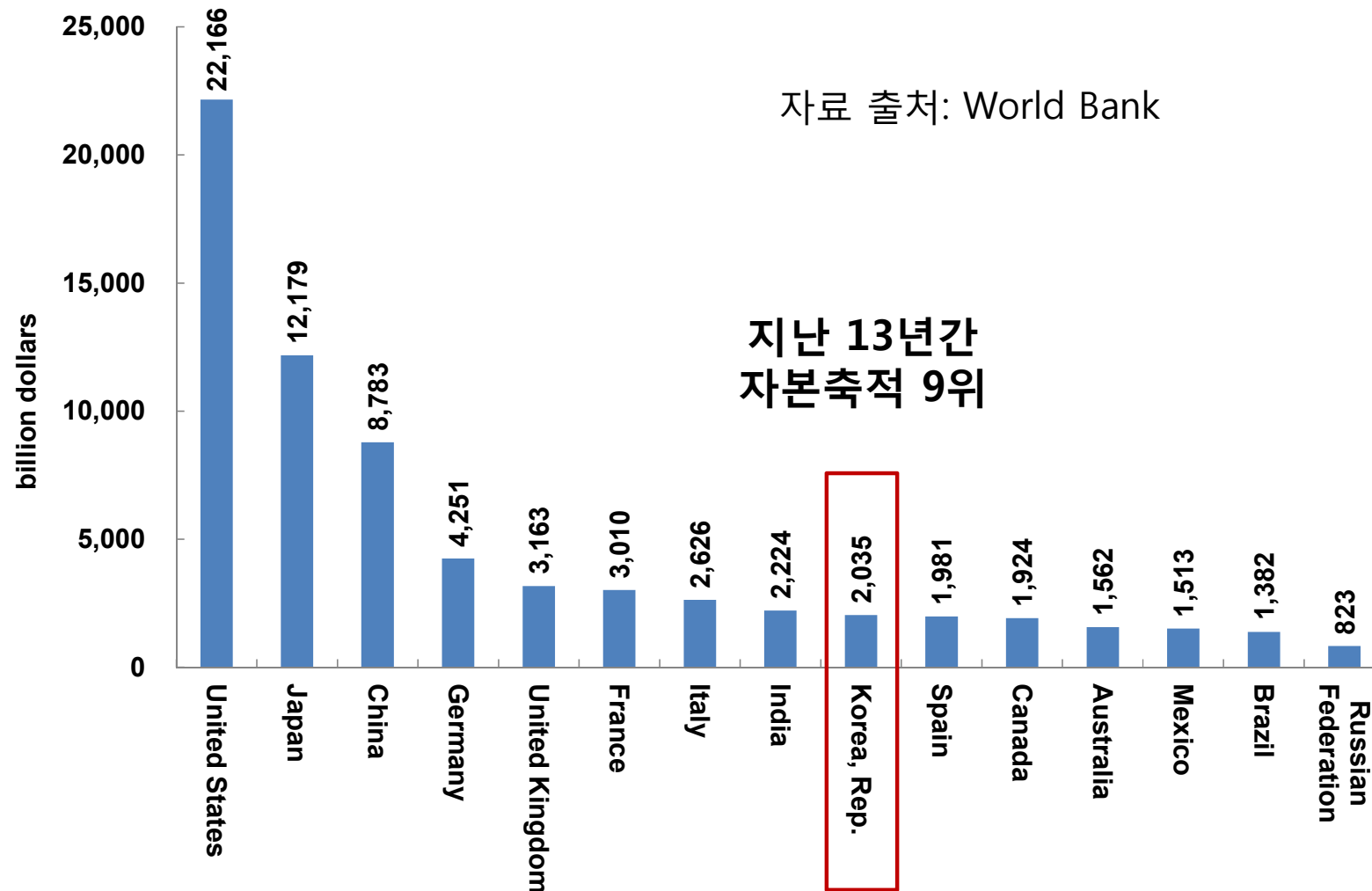
- 자본축적 충분하지 않음:
 - 자본축적은 소득 중 소비 후 남은 자원을 저축하고, 이 저축이 투자되 자본화(capitalization)되면서 형성
- 인구 정체 및 감소 예상
- 비좁은 토지와 빈약한 자원
- 낮은 1인당 GDP → 낮은 경제적 생활 수준

❖ 1950-60년대 최빈국에서 한국 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이끌어온 주요인은 “인적자본(human capital)”

- 기술, 지식, 경험, 숙련도, 성실성 등

한국의 고정 자본의 형성

주요국 2000-2010년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의 합



지식, 기술 등 무형자산의 중요성

❖ Example: Samsung Elec. vs. Apple Inc.

- Apple는 장부로 계상되지 않는 무형자산 가치도 큼

	자산총계	무형자산	시장가치
Samsung Elec.	₩166,300,009,000,000	₩3,672,924,000,000	₩193,698,600,000,000
Apple Inc.	US\$162,896,000,000	US\$4,329,000,000	US\$571,670,000,000
(원화환산)	₩179,185,600,000,000	₩4,761,900,000,000	₩628,837,000,000,000

한국 경제의 미래 원동력

- ❖ 유형자산의 순위가 10위임에도 GDP가 15위권에서 정체
 - 나아가, 1인당 GDP는 35위권
 - 유형자산이 그만큼의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거나
 - 무형 자산의 경쟁력이나 효율성이 처진다는 의미
- ❖ 한국 경제의 미래 차세대 성장 동력은 어디서 찾아야??
 - 인적 자본과 우수한 무형 자산의 결합(융복합)이 필요

인적 자본과 고부가가치 기술 · 지식의 축적

콘텐츠 산업의 특수성

❖ 무형 재화 및 무형 자산을 창출

- 콘텐츠 산업에서 형성되는 무형의 재화는 고부가가치
- 경제학적으로 한계비용(marginal cost)가 0에 가까움: 무한한 수요에 비용 없이 대응 가능
 - cf. 단, 그런 만큼 복제 가능성도 높음

❖ 고부가가치 “인적 자본”의 형성을 가능케 하는 선순환

- 고부가가치 콘텐츠 분야 기술의 숙련 및 체화

❖ 콘텐츠 산업은 자본, 노동 중 자본 소요가 비교적 적고, 노동에서는 양보다는 노동의 질, 고부가가치 기술과 지식이 체화된 질 높은 노동자가 중요

- 자본집약적, 절대적 의미의 노동집약적 산업이 아님
- **기술과 지식 기반의 기술집약적 산업: 창의, 혁신, 창조**

❖ 대규모 자본투자가 아니어도, 성장과 발전 및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경제 성장과 자본축적에 기여하는 파급 효과가 큰 분야

- 대형의 자본 결집이 투입되어 진행되는 프로젝트가 아니기에 **위험의 정도는 높지만 위험의 범위는 적은 편**
- 자본집약적 산업의 사례: 반도체, 조선, 건설·토목, 자동차 등

한국 경제와 콘텐츠 산업

❖ 한국 경제에 대한 도전과 위협

- 기존 비교우위 분야에서의 상대적 경쟁력이 차츰 감소
 - 중국, 인도, 러시아 등 (BRICS) 저임금 대량 노동력 활용이 가능한 국가의 맹추격
 - 브라질, 러시아, 호주, 캐나다 등 자원 부국의 부각
- 복제가 쉬운 기술의 산업, 노동과 자본집약적 산업의 한계

❖ 한국 경제의 지향점

- 인적 자본의 우수성(교육열, 질 높은 노동력 등) 최대한 활용
- 노동집약, 자본집약, 자원집약적 산업을 지양
- “기술과 지식 기반 산업(technology and knowledge based industry)”를 지향하여,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 시급
 - 고급 기술(복제 불가능), 고부가가치의 창출
 - 주로 무형자산에 의한 무형 재화의 생산
- 전향적 인식 변화와 기술혁신이 필요한 시점: 혁신과 창조

콘텐츠 산업의 중요성

- ❖ 대표적인 기술 및 지식 기반 산업
 - 무한한 기술, 지식, 혁신, 창조의 분야
 - 고부가가치
- ❖ 유휴 고급 인력 자원의 흡수
 - 실업 문제 및 노령화 문제의 장기적 해결 방안
- ❖ 유연한 기술 혁신과 타 산업과의 융복합 가능한 분야
 - IT콘텐츠, 문화콘텐츠, 역사콘텐츠, 건설·토목콘텐츠, 디지털콘텐츠, 방송콘텐츠 등
 - 사회 전반적 콘텐츠 인프라의 필요성
(교통 인프라, 통신 인프라, IT 인프라만큼이나 중요)
 - 기존 비교우위 산업과 융복합의 용이성 → 기존 비교우위의 유지

콘텐츠 산업의 기타 효과

- ❖ 글로벌 경제 위기 극복의 기회 제공
- ❖ 국가적으로 콘텐츠 수출은 국가 브랜드 및 국가 이미지 개선
 - 한국의 역사, 문화, 예술을 세계 각국에 알리는 역할 가능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 환경 I

❖ 인력+자본+기술+지식 → 생산 → 혁신적, 창조적 기술 및 지식 등 무형 자산 형성과 축적 → 생산 효율성 증대 & 인적 자본의 양과 질 증대 → 고부가가치 생산 → 무형자산 축적 → ...

- 새로운 기술 발굴 및 발전에 따른 “선순환”

❖ 창의·창조 인재의 육성

- 교육 철학, 교육 정책, 교육 제도의 혁신적 변화가 필요
- 창의 인재의 조기 발굴 및 집중적·체계적 교육 제도나 시장 필요
- 주어진 문제를 맞추는 능력보다 문제를 만들어 내는 능력이 중요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 환경 II

❖ 모험자본 결집을 위한 금융시장 형성

- VC를 포함하여 모험자본의 결집 필요
- 금융은 재능(talent)에 대한 자본(capita)의 최적 배분 기능을 지녀야 함

❖ 금융은 산업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인프라

- Schumpeter: 금융의 성장이 경제 성장을 견인
- 재능과 자본의 연결
-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

콘텐츠 및 콘텐츠 금융투자의 특성

- ❖ 통상적인 신생·벤처 프로젝트 및 이에 대한 금융투자와의 유사한 위험 특성
 - High risk & high expected return (risk-return trade-off)
- ❖ 실패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대규모 자본 소요가 발생하지 않아, 실패하더라도 사회적 파급 효과 미미
 - 위험의 정도와 위험의 범위를 구분
- ❖ 성공시 대단히 투자원금의 수십배에 달하는 극단적으로 높은 수익률 실현
 - One shot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 현금흐름 창출
 - 생산에 있어 한계 비용이 0에 가까움 → 수요만 있다면, 무한 공급 및 무한 부가가치 창출 가능
 - 타 분야에 대한 연관 효과 발생

콘텐츠 금융시장의 현실

❖ 시장의 현실

- 모험자본 결집이 어려움 → 사회적으로 최적 수준에 못 미치는 투자가 이루어짐 (market failure!!)
- 투자자의 안전 장치 요구 계약:
 - 지분투자보다는 대출 계약, 대출에서도 보증, 담보 요구
 - 지분투자에서도 풋백옵션과 같은 원본 보전 요구
- 자본결집도 적지만, 콘텐츠 산업에 종사하는 기술 개발자의 과감하고 혁신적인 기술 개발 유인을 훼손

❖ 시장자발적 유인 및 계약에 따른 자본의 공급·수요가 원칙이지만, 어느 국가도 벤처 프로젝트를 전적으로 시장이 맡기지 않음

- 미국의 SBIC 프로그램이 대표적 사례: SBIC는 미국 벤처 산업 및 벤처캐피탈 시장의 발전의 핵심 요인

한국 금융시스템 및 금융시장

❖ 기관 금융(간접금융, 은행)

vs. 시장 금융(직접 금융, 증권시장)

- 2011년 GDP 대비 Market capitalization of listed companies = 89%
- 2011년 GDP 대비 Domestic credit provided by banking sector = 102%

❖ Public market

vs. Private market

- Public market >> Private market
- Public market: 증권시장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채권시장), 펀드시장, 연금 및 보험시장, 은행시장
- Private market: PE, VC, KONEX, ...
- Public market과 private market의 결합: SPAC

❖ Domestic capital vs. Foreign capital

- 두 가지 역할이 엇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통화 시장 자유화가 안된 상태에서 전자의 규모와 역할이 훨씬 클 수 밖에 없음
- 외국인의 모험 자본 결집의 어려움

한국 금융환경과 콘텐츠 분야

- ❖ 콘텐츠 분야는 (i) 기관 금융보다는 시장 금융, (ii) 공적 시장 보다는 사적 시장의 기능과 역할이 중요한 분야
 - 현재 한국 금융시장 체계는 콘텐츠 분야에 좋은 환경이 아님
- ❖ 비단 콘텐츠 분야뿐만 아니라 기타 기술 및 지식 기반 산업(신생·벤처·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에도 좋은 환경이 되지 못함
 - 그렇다면, 좋은 환경은?

- 기관 중심보다는 시장 기반 금융의 확대와 강화
- 공적 금융시장보다는 사적 금융시장의 적절한 발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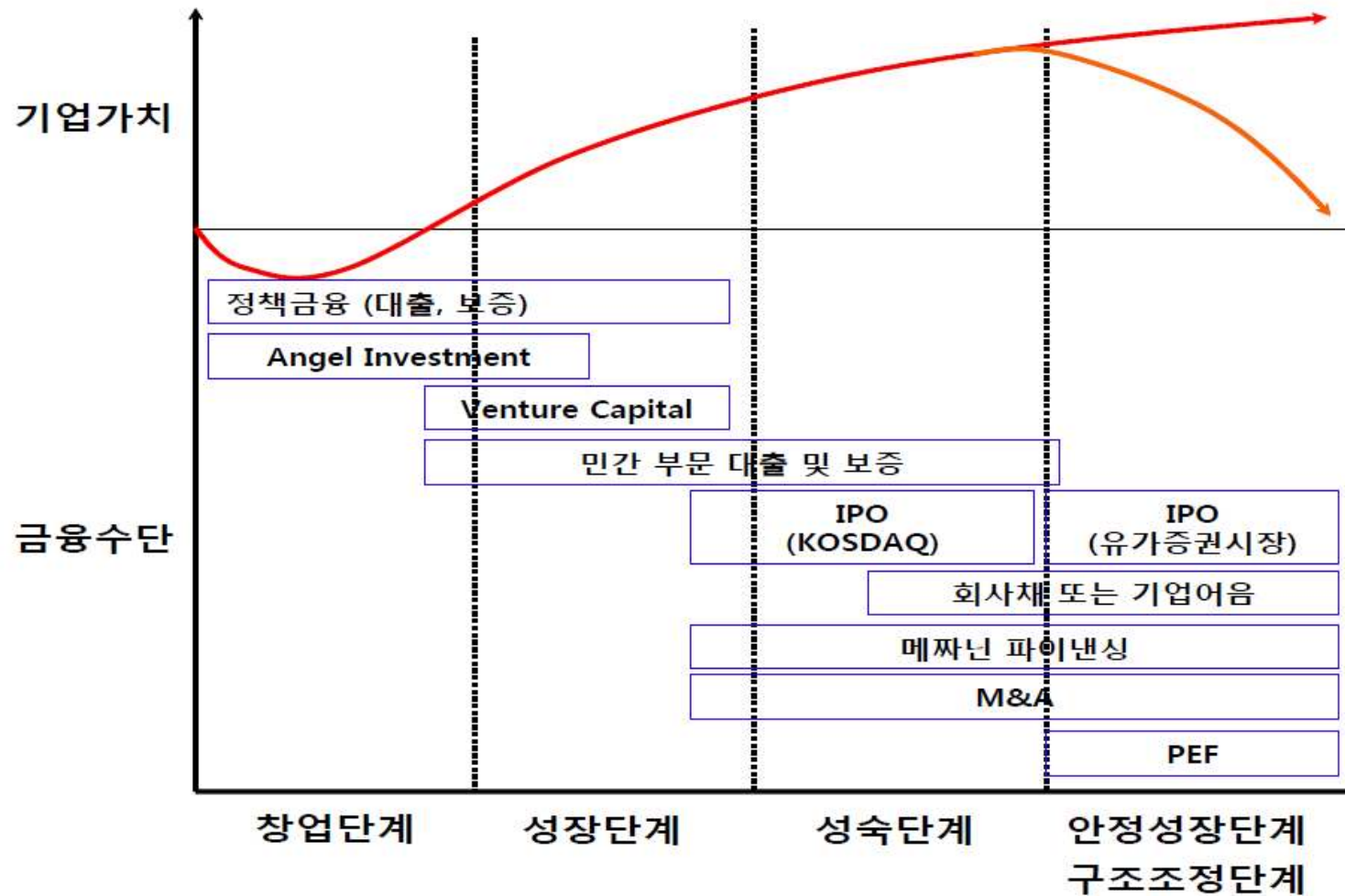
❖ 한국 경제 스스로 미래 차세대 성장 동력이 무엇인지를 인지하여, 금융시장의 근원적 체질 자체를 변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

- 정부 각 부처의 불필요한 경쟁이 아니라 조화로운 노력이 필요
- 신생·벤처·중소·콘텐츠 기업의 발굴과 성장에 적합한 금융 인프라를 갖춰 나가야 할 필요

콘텐츠 분야 금융

- ❖ 콘텐츠 분야 스스로도 이러한 금융시장의 악조건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 기관 중심의 금융보다는 시장 중심의 금융에 주목
 - 공적 금융시장보다는 향후 설립될 KONEX, SPAC을 포함한 사적 금융시장에서의 자금 조달에 노력
 - 필요에 따라, 외국 자본도 개방적으로 받아들일 필요
 - 정책금융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시장에서의 생존을 최대한 추구

기업의 성장 단계와 금융



콘텐츠 분야로 자본공급 가능한 시장과 제도

❖ KONEX

- 중소기업 주식 전용 거래 시장으로 위험도로 인해 개인 투자자 배제
- 기관 및 연기금만 참여할 것으로 예상됨
- 아직 금융위원회 논의 중

❖ KOSDAQ

- 초기에는 신생, 벤처 기업의 자금조달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
 - 현재 신생, 벤처 기업의 상장 불가 → 이에 KONEX 필요성 제기
- 현재 상당히 성공 궤도에 오른 기업이 상장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

❖ SPAC

- 우회상장 방식을 건전하게 이용하여 신생, 벤처, 중소기업의 장내 증권 거래소 시장 상장을 도움
- M&A되는 기업과 SPAC의 win-win 게임

콘텐츠 산업이 이용가능한 사모펀드 제도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 투자회사, 투자조합 제도
- 문화산업전문회사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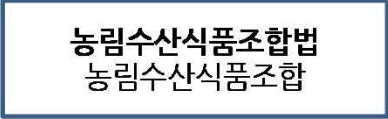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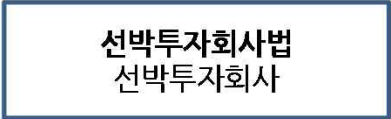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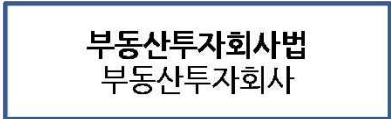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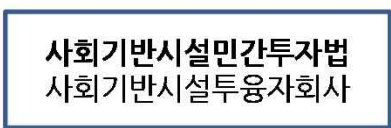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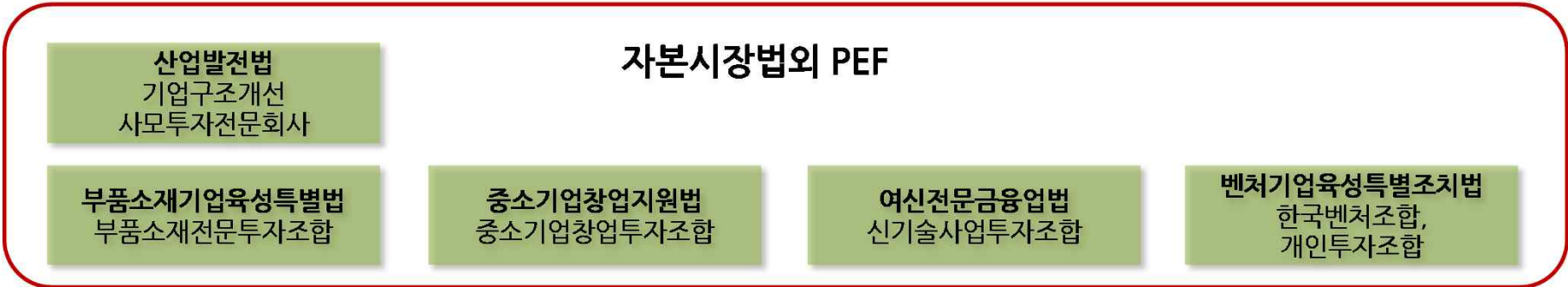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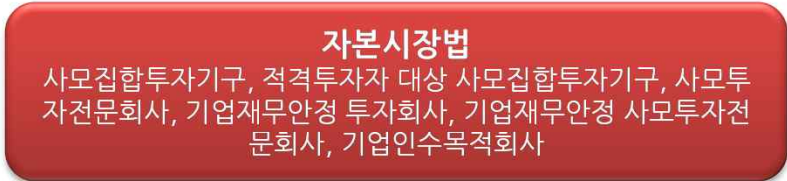
❖ 기타 다양한 사모펀드 제도

- 주요 자원: 모태펀드 (KVIC)
- 이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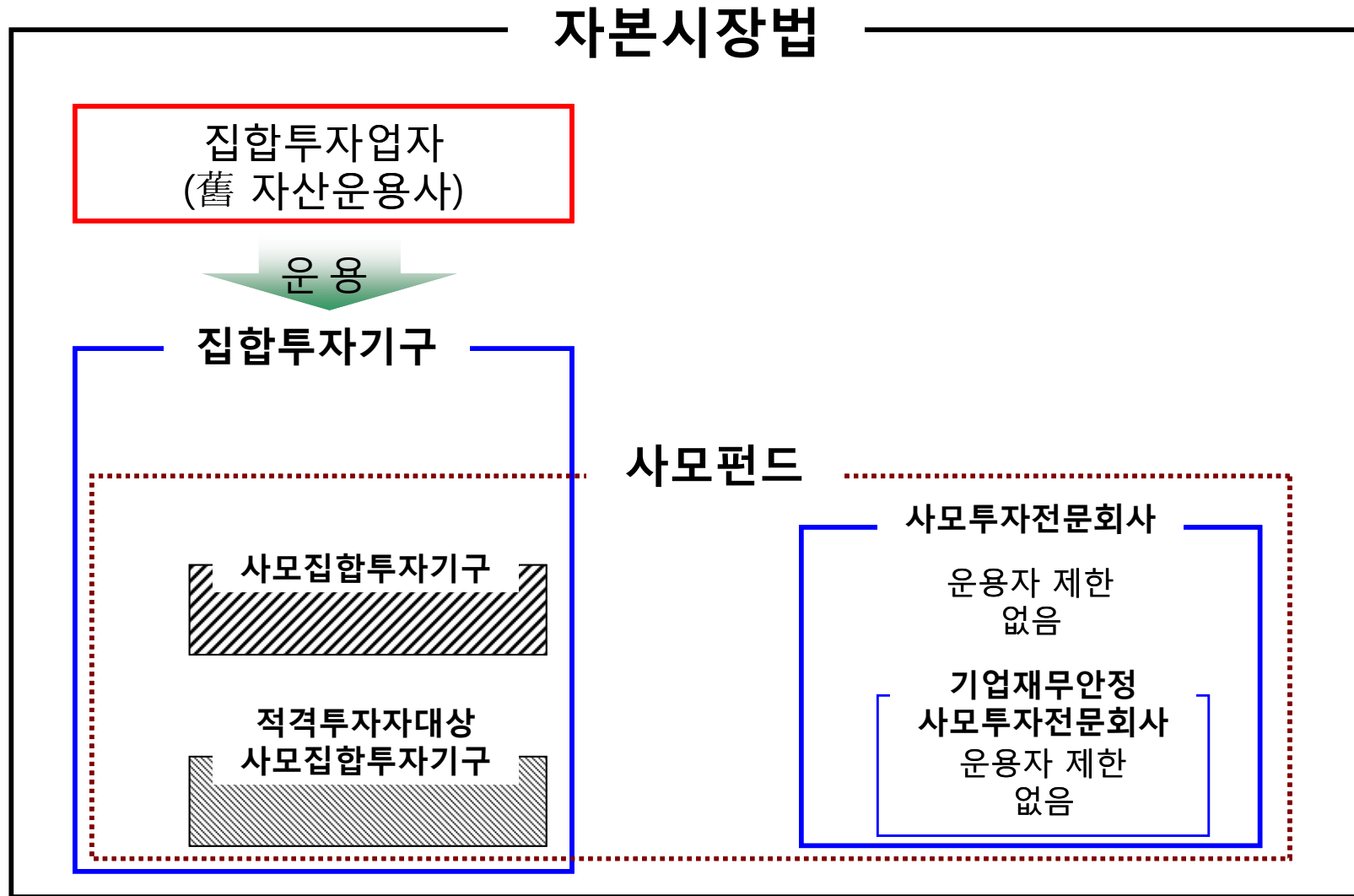
❖ 기타 다양한 지원 제도

- 신보, 기보, 수출입은행, 무역보험, 정책금융공사, 산업은행, 기업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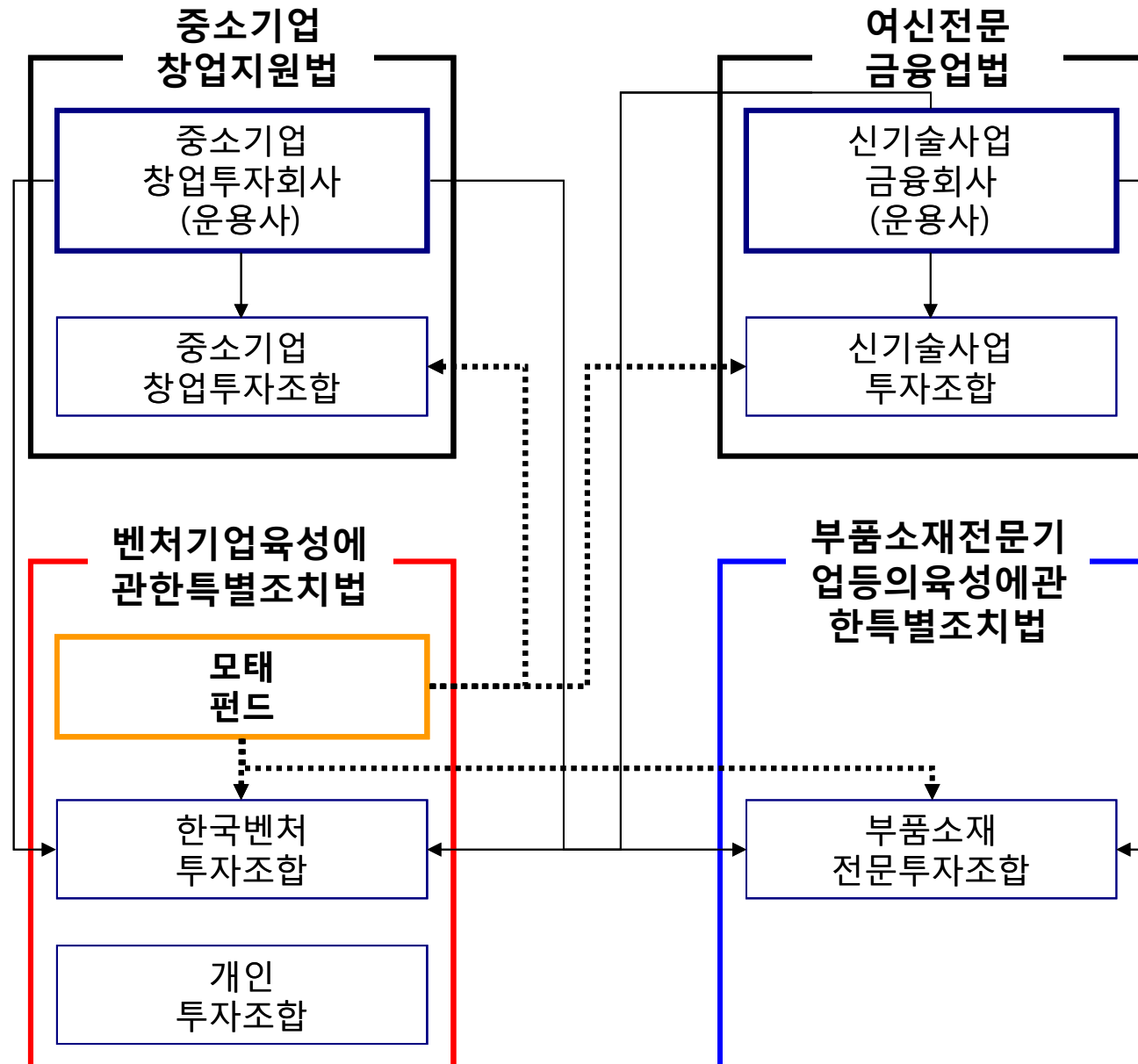
자본시장법과 다양한 공·사모펀드 제도



자본시장법 내의 사모펀드 제도



한국의 벤처캐피탈 법제와 사모펀드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금융시장에 대한 정책적 제언

- ❖ 콘텐츠 산업에서 각종 다양한 제도를 인지하고 충분히 활용하는 노력 필요
 - 문화콘텐츠 산업에 관한 한 문산법 제도가 가장 적합
 - 규모가 큰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타 제도를 고려하여, 자본 결집 시도
 - 대형프로젝트로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경우 public market이나 그러한 특성이 있는 분야로 진출 (예: SPAC)

❖ 정부는 비효율적으로 분산, 중복된 사모펀드 및 사적 금융시장을 통합, 정비하여 효율적 작동과 효율적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으로의 전환을 위한 법제의 개선이 필요

- 사모펀드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금융 역량의 결집을 통한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 집행

❖ Example. 미국의 신생, 벤처,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통합된 SBIC 프로그램 주목:

- 신생벤처기업 자체에 대한 출자, 대출, 보증
- 신생벤처기업에 투자한 펀드에 대해서 출자, 대출, 보증 등

❖ 정책금융 집행에 있어 “할당(rationing)”보다는 어느 정도 “선별(screening)”하여 선택과 집중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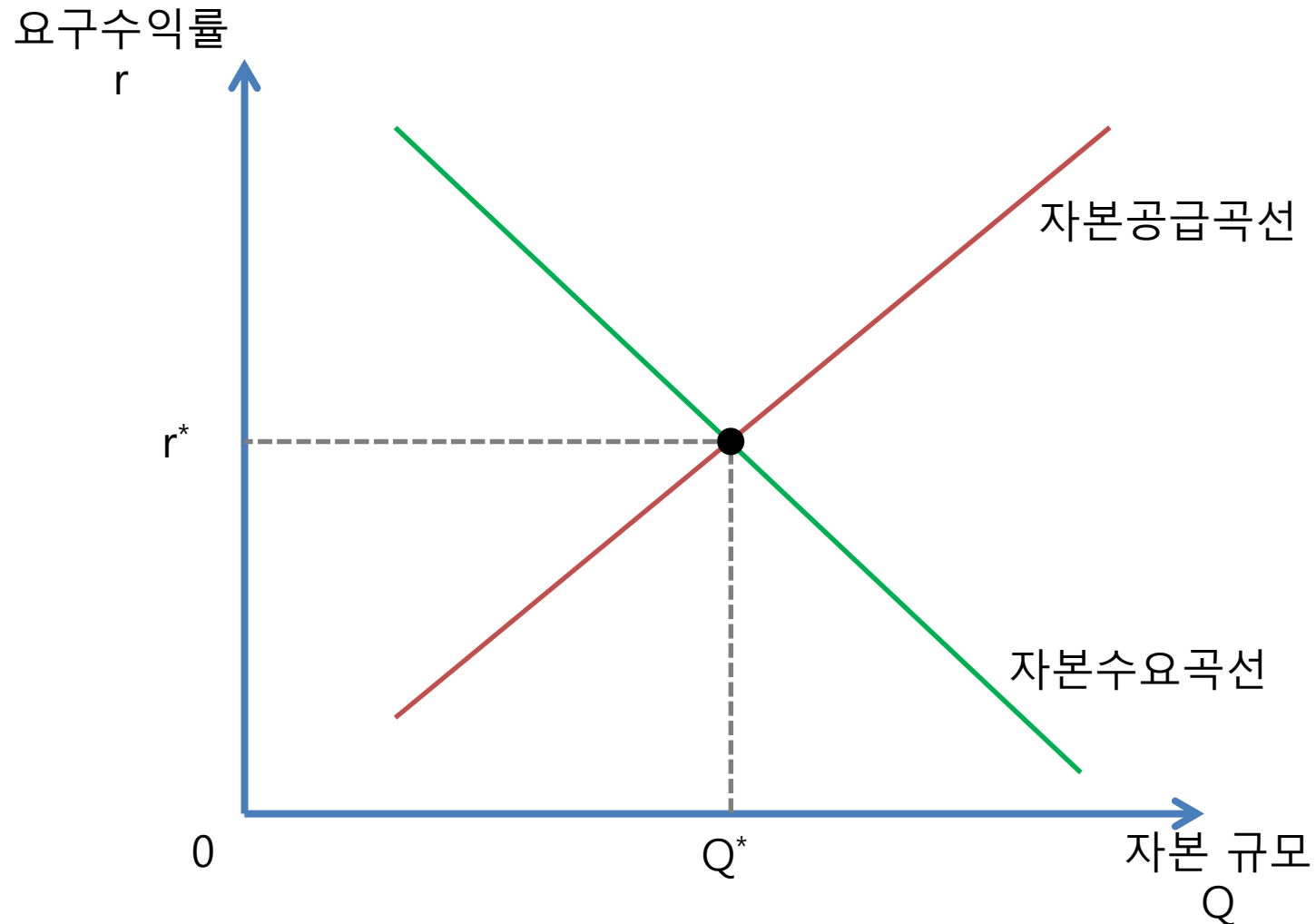
- 정책금융의 성과를 얼마를 배분하여 주었느냐로 측정해서는 지속적 지원 체계가 되기에는 곤란
- 선택과 집중이 개발자에게도 우수한 콘텐츠 및 우수한 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 개발 인센티브를 강력하게 자극

❖ 문산법상의 개선 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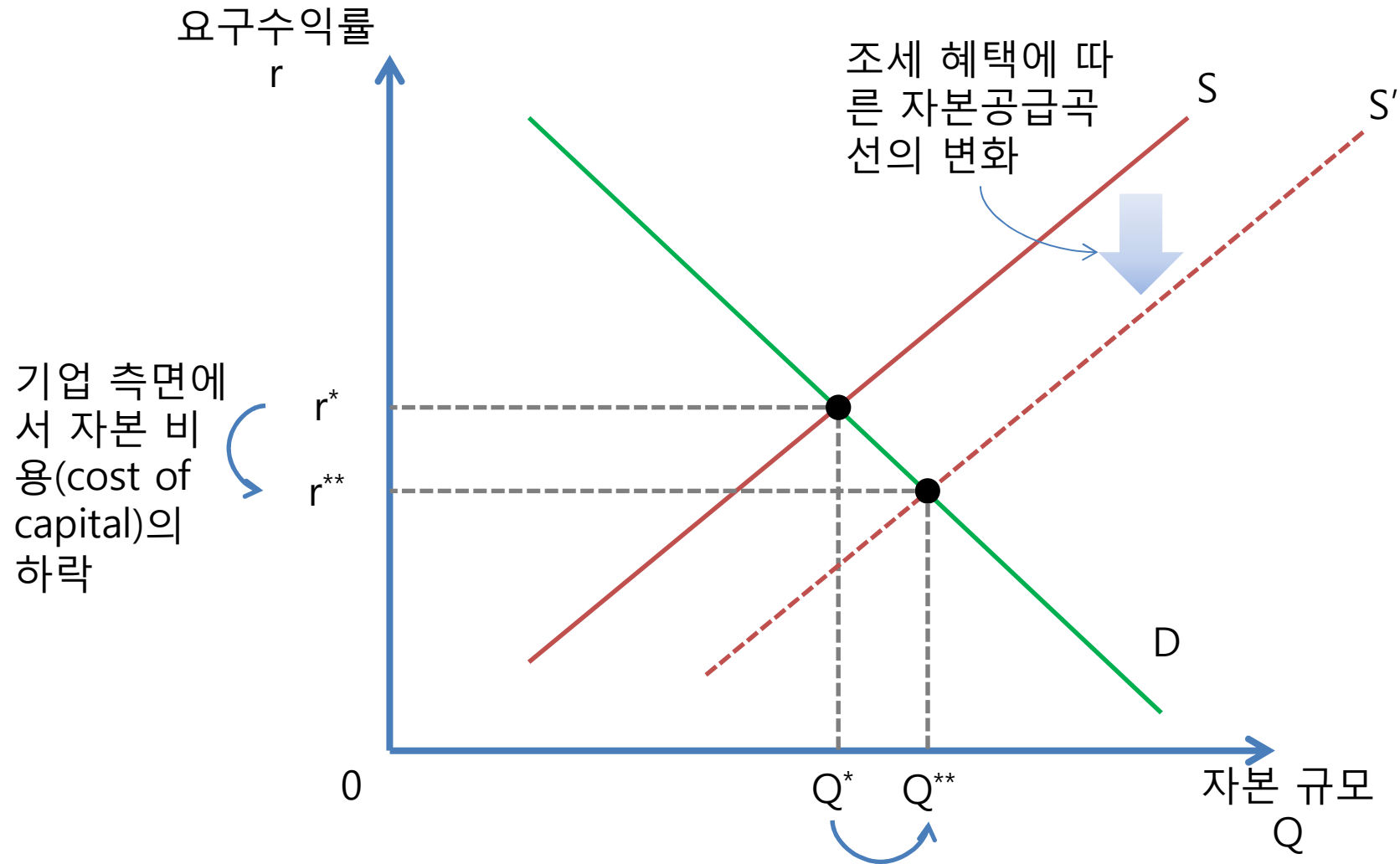
- 현행 투자회사에 대한 자격요건을 창투사나 신기술사로 제한해야 할 필요는 없음
 - 문산법 제8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등록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제2항에 따라 허가받거나 등록된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
 - 실제 투자회사-투자조합 제도가 잘 이용되지 않고 있음: 창투사나 신기술사는 앞서 벤처캐피탈 법제가 제공하는 각종 인센티브만으로도 충분
- 문산법이 정하는 문화·콘텐츠 분야에 투자하는 개인, 기관, 펀드는 근거 법제를 막론하고, 문산법상의 지원을 부여하여 문화·콘텐츠 분야에 대한 투자자 기반을 더욱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

금융투자에 대한 조세 혜택의 효과

자본시장에서 균형 조달 자본 규모(즉, 투자) 및 이자율의 결정



자본시장에서 균형 조달 자본 규모(즉, 투자) 및 이자율의 결정에 조세가 미치는 영향



기업 측면에서 조달 자본 규모의 증대 → 경제 전체적 투자 증대

조세의 장단점

- ❖ 조세는 최적의 경제적 의사결정을 왜곡하여 사회 후생 (social welfare)을 저하시키는 특성을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음
 - 최근의 법인세 증가 논의도 쉬운 문제가 아님
 - 조세로 인한, deadweight loss의 발생
- ❖ 하지만, 국가 조직의 경영,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공공재 공급, 전기, 수도 등 기반 시설 및 자원의 공급 등을 위하여 세수 확보가 현실적으로 필요
 - 공정하고도 투명한 조세 정책이 중요

성장 동력에 대한 조세

- ❖ 미래 성장 동력 분야는 신생, 벤처, 콘텐츠 분야 등으로 시장 실패가 발생하여 국가적 관리와 육성이 필요
- ❖ 세수 확보와 공평 과세가 더욱 중요한 현안인지, 미래 성장 동력의 발굴과 성장이 더욱 중요한 과제인지에 대한 판단은 명확
- ❖ 미래 성장 동력 분야를 “공공재(public goods)”로 파악한다면, 동 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이 잘못되고 공평성을 해치는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주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른 세제 혜택

- ❖ 제30조(세제지원 등) ① 정부는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문화산업진흥시설, 문화산업단지, 제작자·투자회사·투자조합이 문화산업에 투자하는 경우, 창업자 및 창업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 세법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문화산업진흥시설과 문화산업단지의 조성 및 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장비, 설비 및 부품 등에 대하여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등록면허세의 면제 등)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같은 법에 따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한다), 「임대주택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제120조제4항에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설립등기(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등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8조제2항·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5.19>

문화·콘텐츠 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 체계가 매우 제한적

The End.

Thank You Much.